

# 김정일 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담론과 담론의 정치

배 성 인 (명지대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 ◆ 논문 요약 ◆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속에서 주체사상의 변화를 통해 대응하고자 했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의 담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통제와 부작용을 초래했고 주민들의 동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 주민들의 가치의식은 변화되고 있고, 주체사상의 잦은 변화에 무관심하거나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 사후에는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 선군정치, 과학기술 중시사상 등 지배 담론들을 생산하여 체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들 담론들은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대중동원, 경제건설 그리고 사회적 통제와 사상교육을 위해서 기능하였다. 김정일 정권 이후 등장한 많은

담론들을 보면 부강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담론들이 북한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들 담론들은 여전히 수령제를 정당화하는 통치담론이라는 점에서 주체사상의 틀 안에 있다. 즉 주체사상에 근원을 둔 하위담론들이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지배이념의 쇠퇴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체사상의 긴장현상과 관련이 있다. 또한 지배이념의 통제력 쇠퇴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체사상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주체사상의 통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계속되는 주체사상의 변화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문을 누적시키고, 이는 과거에 비해 지배이념으로서의 상대적 왜소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 I. 머리말

북한에게 있어서 1998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이다. 그것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극도로 심화되는 체제위기를 완화시키고 김정일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에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

성이 점차 부각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김정일은 당과 군, 그리고 정부의 고위엘리트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력승계작업을 완료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도 정권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수수께끼의 나라임에 틀림없다. 그 동안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지난 50여년 동안 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지배체제를 건설과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체제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경제난과 식량난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오히려 핵 문제로 인해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 북-미 관계의 갈등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를 조성한 결정적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명분과 구실로 패권주의정책과 핵선제공격전략, MD계획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처럼 북한의 위기는 경제난 식량난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핵문제로 인해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탈북자들의 증가와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담론들을 등장시켜 사상적 교육적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북한의 체제위기는 경제위기에서 시작되어 정치적 위기와 이데올로기적 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위기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는 불안정하고 부분적으로 위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며 경제회복을 꾀한다는 것이 그들의 숙명과제인 것이다. 1998년 북한이 내세운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는 외부세계에의 적응보다는 체제수호를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함으로써 냉전과 전시체제의 해소라는 대북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여줬다. 즉 북한은 여전히 현상고수와 현상 타파의 갈림길에서 아직도 일관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시장경제체제로 진입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체제위기가 당장 붕괴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1995년이래 미국이 기

대하고 예측했던 북한체제의 와해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임박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다. 물론 식량난, 내부적 자원의 총체적 고갈, 배급체제의 붕괴 그리고 중앙통제의 이완과 북한주민의 지리적 이동의 활성화 등의 위기가 지속되어온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전면적 북한체제의 동요와 궁극적으로 내부로부터의 자생적 변화의 가능성까지를 내포하는 현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 동안 북한체제의 위기로인에 대하여 과대평가한 측면이 많았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다분히 체제붕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연구가 현상적인 측면에 치중하다 보니 많은 연구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심층적이지 못한 문제점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을 담론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속에서 주체사상의 변화를 통해 대응하고자 했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의 담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통제와 부작용을 초래했고 주민들의 동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 주민들의 가치의식은 변화되고 있고, 주체사상의 잦은 변화에 무관심하거나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 사후에는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 선군정치, 제2의 천리마대진군, 과학기술 중시사상 등 지배 담론들을 생산하여 체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많은 담론들의 등장은 지배 이념으로서 주체사상의 통제력 쇠퇴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 시기 담론정치의 구성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위기에 대한 대응양식으로서 담론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고찰하고 그 한계와 변화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틀

### 1. 담론과 담론의 정치

담론은 대화를 기본으로 하며 담화나 논의를 뜻한다 그리고 이런 담론은 그 성격상 사회적이다. 즉 담론은 사회적 실체인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다.<sup>1)</sup> 현대 담론이론에서 다루어지는 ‘담론’은 그것과 관련된 제도와 그 담론이 유래하고 화자를 특징짓는 어떤 ‘입장’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의 사회적 생산이 일어나도록 하는’ 모든 제도적인 실천이나 기술도 담론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담론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담론을 ‘이데올로기’ 실천이라는 국면에서 벌어지는 의미의 언어적, 비언어적 구성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sup>2)</sup>

일상에서 행해지는 발언의 의미는 그 발언이 수행하는 언어행위와 이에 관한 화자의 의도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저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언어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저술의 원래적 의미를 밝힌다는 것은 그 저술의 언어행위, 곧 저자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 했고 무엇을 성취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물론 저술의 언어행위는 그 발언의 언어적 의미뿐만이 아닌, 발언을 둘러싼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3)</sup> 여기에는 좁은 의미의 문법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신념과 가치체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언어의 요소가 이처럼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언어가 콘텍스트의 전부는 물론 아니다. 콘텍스트는 한두 개의 요소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저술의 원래의 의미를 알기 위해 살펴보아야 하는 모든 요소들, 가장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 사회의 여러 특징들”을 모두 포함한다. 각 사회에

1) Terence Ball, “In the Shadow of Babel : The ‘Scientific’ Reconstruction of Political Discourse,” Bhikhu Parekh & Thomas, *Political Discourse* (Sage Publications Inc, 1987).

2) 다이안 맥도넬 지음, 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pp. 11-14.

3)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를 발언의 콘텍스트(context)라 부른다. 콘텍스트는 정치사상사의 역사적 연구방법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단어이다.

는 이 같은 독특한 정치언어의 체계뿐 아니라 그것이 정치언어로서 기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회구성원들간의 묵시적·전통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사회에는 정치적 담론의 세계와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규정하는 하나의 우세한 언어 구조가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자주 억압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담론의 정치란 지배계급에 의한 ‘언어를 통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담론의 정치란 집권세력을 비롯한 지배블럭이 자신들의 이해를 통합하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상징과 가치체계를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중과 반대세력의 대응을 포괄하는 동태적 과정 전체를 가리킨다.<sup>4)</sup>

## 2. 담론,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담론

한편 담론은 이데올로기의 특수한 형식 중의 하나이며 이데올로기의 투쟁에 의하여 담론의 의미는 담론의 ‘외부’에서 형성된다. 단어의 의미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투쟁을 벌이는 ‘입장’과 그것과 관련된 ‘제도’(이데올로기적 제도)에 따라 변화한다. 단어 자체보다도 ‘담론과정’과 관련된 단어들의 배열, 조합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과학의 중립성’에 대한 신화를 해체한다. ‘입장’들과 관련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과학 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정된 과학담론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담론은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취하며 어떤 것도 중립적이지 않다.<sup>5)</sup>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담론들은 그 이데올로기 영역의 일부분이며 이데올로기는 종속관계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생산관계에 뿌리를 둔 계급투쟁과 관련된 국가 제도와 장치들의 투쟁을 통한 대립관계에서 생성된다. 담론은 이데올로기적 종속의 직접적 도구가 된다. 하지만 다른 기능도 가

4) 강명구·박상훈,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한국사회학』 제31집 봄호(한국사회학회, 1997), p. 125.

5) 다이안 맥도넬 지음, 임상훈 옮김, 앞의 책, pp. 57-74 참조.

진다. 그것은 담론이 ‘규율’과 같은 실천적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적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실천 이데올로기(‘규율’과 같은)는 이론 이데올로기에 형식과 한계를 부여하고 이론 이데올로기는 실천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정치담론은 정치가의 공식적인 담화, 즉 연설이나 논설에서 나타나는 논의 또는 정치영역에서 전개되는 특정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칭한다. 정치담론 또는 통치담론은 레토릭의 차원을 넘어서 특정 정치체제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권력 및 자원의 분배 양식을 정당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매개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정치권력은 특정 담론을 생산하고 유지하며,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확고히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치담론은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현존하게 하는 매개체이며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지닌다<sup>6)</sup>

따라서 체제의 권력당국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든 그것이 폭력과 강제의 공포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옳고 적절한 것이라는 신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권력을 장악한 지도자는 언어를 통해 말을 통한 정당화 작업을 시도하며 담론의 정치가 행해진다 즉 정치담론은 권력이 기본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숨기면서 동의나 요청에 의한 합리적으로 방식으로 권력을 정당화하는데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

알튀세(L. Althusser)는 인간은 단지 이데올로기 안에서만 주체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인간의 의식은 가상의 종속 형식 아래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일상적 실천을 하는 이데올로기 장치들 안에서 스스로에게 생각하도록 주어진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특수한 개인이 된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 호출한다.’<sup>7)</sup> 그러나 개인은 이에 대해 동일화(동의, 순종), 반동일화(저항), 비동일화<sup>8)</sup>(편승하는 동시에 저항하는)의 길을 갈 수 있다.<sup>9)</sup>

6) 정성장·백학순,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세종연구소, 2003), p. 27.

7) 이 명제의 한계는 동일화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8) 폐쇠가 사용한 개념이다.

9) 다이안 맥도넬 지음, 임상훈 옮김, 앞의 책, pp. 50-54.

따라서 자연히 담론은 첫째, 지배담론에 대한 투쟁의 수단(저항의 담론)으로 생성되던지, 둘째, 지배담론의 통제, 지배와 제한 속에서 생성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푸코(M. Foucault)는 더 나아가 어떤 지배적인 통제들이 지배 담론에 반대하는 저항적인 담론들의 보급에 대해서조차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담론의 보급을 통제하는 저작권은 부르주아 재산권에 의해 제한 받는 것이다.<sup>10)</sup>

그래서 담론은 지배담론과 그 밖의 담론 즉 비지배담론으로 구분된다 권력과 관련하여 정치적 또는 정치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담론은 지배담론이다. 그것은 지배담론이 사회 구성원 또는 피지배자들에 대한 종속화의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sup>11)</sup>

푸코, 알튀세 등이 담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배질서의 재생산이 폭력뿐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지배재생산이 담론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도 있다.

### III. 북한체제의 위기와 담론의 등장

#### 1. 북한체제 위기의 원인

북한의 체제 위기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는데, 북한 경제의 실패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주의체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체제위기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1980년대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북한체제의 구조적 위기는 1989년의 소련과 동구권 몰락이 그 시발점이다. 대외무역체제의 붕괴는 에너지와 같은 북한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던 주요 물자의 공급격감을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관료적 배급에 의존하는 북한의 관리생산체제에 급

10) 위의 책, p. 116.

11) 김도중, “남북정상회담과 국내 정치: 과제와 전망,” 『통일경제』 통권 제72호 (현대경제연구원, 2000.12), p. 77.

작스러운 배급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총체적 공급부족 현상은 배급제도의 기능상실도 유발했다.

1993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의 실패를 이례적으로 자인했다. 이에 북한은 식량 및 소비재 부족, 외환 및 에너지 부족현상을 유발했고 북한 당국은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완충기를 설정했다. 그러나 완충기도 3년 정도 생각하였던 것이 4년으로 연장되어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북한 당국은 완충기 동안 경제구조 조정을 위해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라는 '3대 제일주의'를 기본전략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식량난과 소비재 부족, 외환부족이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연이어 발생한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식량생산의 급감이나 파국의 깊이를 더하게 하였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충격과 허탈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1995-96년 두 해에 걸친 미증유의 수재로 인한 식량난은 계획경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또한 경제적 타격이 겹쳐 최악의 기아 국가로 전락한 북한의 위기상황은 곧바로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질 듯 했다.

북한의 식량난은 본질적으로 총량의 부족이나 가용량에 대한 지역·계층간의 분배불균등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지역간 차는 정치적 우선순위의 차원에서 평양권과 지방의 분배 우선 순위가 다를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식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수송수단의 미비로 오지나 변경지역에 분배가 미흡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직업이나 계층의 차이에 따라 식량난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암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당 간부, 무역 혹은 자재일꾼, 계산에 밝은 일부 노동자)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sup>12)</sup> 더욱이 식량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 따라 식량배급 관리들의 부패 주민들의 식량도둑, 협동농장의 은닉 등 각종 부패와 비리가 횡행함으로써 식량난이 더욱 가중되었다.<sup>13)</sup> 북한의 식량난은 전반적인 북한 경제위기와

12) 김연철,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과 농업정책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 31호(평화문제연구소 99년 상반기, 1999), pp. 10-11.

농업생산의 부진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북한 식량난에 일조한 공업생산의 위축은 북한경제가 풀어야 할 지상과제인데 이는 우선 에너지원의 확보, 공급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다. 북한경제의 위기는 에너지난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북한은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에너지원을 석탄이나 수력 등 국내부존자원에만 의존하여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최소화하였으며, 심지어는 공업에서도 화학공업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석탄화학공업 중심의 공업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 이후 석탄생산의 부진으로 에너지난을 야기하고 나아가 산업생산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난은 1990년대 들어 소련방의 해체와 경제난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방식의 전환으로 더욱 악화하였다. 즉 과거 구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대해 국제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현금결제(Barter Trade) 형태로 원유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은 그들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국제시세에다 경화결제를 북한에 요구하여 원유의 해외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sup>14)</sup>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수립 후 외연적 경제성장전략에 따른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 외연적 경제성장전략이란 생산성 증대보다는 생산요소를 대규모로 투입하여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양적인 성장전략으로서 후진 경제가 대개 공업화 초기 급속한 자본축적을 위해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전통적 농업경제에서 공업화를 이룩해 나가고자 할 때 상당한 기간동안 유효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13) 김경량 외, “북한 농업 실태와 남북한 농업통합의 과제,” 『김정일 시대의 북한체제와 발전 전망』 (성균관대 한국산업연구소 심포지움 자료, 1997, 11); 김찬규, “북한의 식량부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민족통일연구원, 1998); 박경서, “북녘의 식량난과 그 실상,” 『통일시론』, 통권 제2호(청명문화재단, 1999) 참조.

14) 박주식,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의 경제적 대응방안,” 『평화연구』 제6호(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7), pp. 173-174. 가용 원유량의 축소가 북한이 당장 해결해야 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는 1994년 북미 핵협상에서 북한이 우선적으로 중유제공을 요구한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외연적 성장 자체는 어느 일정시기가 지나 생산성 증대 및 기술진보에 의존하는 내포적 성장과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sup>15)</sup> 북한도 초기 산업화에는 효율적인 성공을 보였고,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 능력을 자랑하였지만, 선진 사회주의 국가가 겪은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남한과의 대치상황에 따라 과도한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하였고,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진영의 배제전략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다.

## 2. 위기의 지속성과 변화

### 1) 위기의 지속성

북한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회통제 메카니즘과 이데올로기적 동원을 통해 북한 사회를 철저히 통제해 왔다. 이러한 사회통제 정책이 산업화 이후의 주민들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특히 불균형적인 계획경제는 주민들의 일상 소비재는 상품의 공급체계를 마비시키고 나아가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급이 부족할수록 사회적 일탈행위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에서는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기존의 사회통제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통제력이 약화되면 체제가 이완되는 현상이 확산된다. 즉 경제난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위협받는 상태에서 주민들 사이에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발생하고 전반적인 사회 통제를 이완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체제이완 현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인숭배체제의 동요이다. 북한주민들의 수령에 대한 숭배는 물질적 삶이 보장될 때 제대로 작동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유동성 증가와 조직생활의 이완이 국가기구의 사회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의 약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sup>16)</sup> 이와

15) 양문수, “북한 경제개발의 역사적 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2호(북한연구학회, 2000), p. 162.

함께 각종 사회범죄의 증가와 부패확산, 그리고 배금사상의 만연에서도 찾아진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개인 소유권에 대한 강한 집착과 시민들의 법 질서 의식의 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노동 의욕의 감퇴와 기존의 노동 윤리의 변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주민통제수단이었던 배급제도 및 정보통제수단이 약화되고 있고, 개인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함으로써 민심이반, 탈북자, 암시장 및 제2경제, 부정부패, 범죄 등 사회일탈현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군부에서까지 일탈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제침체를 해소하고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부분적인 개혁 개방정책은 외부세계의 정보와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을 가져왔으며, 이는 북한주민들의 사적 자율화 의식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러한 일탈현상들이 반드시 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거나 지속시키는 것은 아니다. 체제저항적인 측면도 있지만 물질주의적 실용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탈현상들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체제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흐름을 거역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북한주민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체제의 위기는 가속화 될 것이다.

<표 1>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

|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명목GNI/<br>조원(억달러) | 17.0<br>(212) | 17.2<br>(223)   | 17.3<br>(214) | 16.8<br>(177) | 17.6<br>(126) | 18.7<br>(158) | 19.0<br>(168) | 20.3<br>(157) | 21.3<br>(170) |
| 1인당GNI/<br>만원(달러) | 79.7<br>(992) | 79.7<br>(1,034) | 79.6<br>(989) | 77.1<br>(811) | 80.2<br>(573) | 84.9<br>(714) | 85.6<br>(757) | 91.2<br>(706) | 95.4<br>(762) |
| 경제성장률(%)          | -2.1          | -4.1            | -3.6          | -6.3          | -1.1          | 6.2           | 1.3           | 3.7           | 1.2           |
| 무역총액<br>(억달러)     | 21.1          | 20.5            | 19.8          | 21.8          | 14.4          | 14.8          | 19.7          | 22.7          | 22.6          |
| 수 출               | 8.4           | 7.4             | 7.3           | 9.1           | 5.6           | 5.2           | 5.6           | 6.5           | 7.3           |
| 수 입               | 12.7          | 13.1            | 12.5          | 12.7          | 8.8           | 9.6           | 14.1          | 16.2          | 15.3          |

자료: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http://www.bok.or.kr> 2003. 11. 20 검색)

- 16) 국가관에도 변화가 나타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점차 희박해지고 무사안일 또는 보신주의가 만연해 ‘우선 나부터 살고보자’는 풍조가 번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 등장한 ‘우리식대로 살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등 각종 구호는 이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완충기 동안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4년의 -2.1%에서 1997년 -6.3%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후퇴를 하였다. 완충기는 북한에서 그 동안 표출되지 않았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은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지하 암시장의 등장, 탈북자의 증가 등 체제 위기요인이 극대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식량배급체제는 1995년부터 붕괴되어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 등 평양에서 먼 지역부터 먼저 배급이 끊겼다. 이 때문에 평양과 그 외 지역의 지역적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이 시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로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렸다. 이 시기에 북한 경제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공장 가동율도 20-30%로 하락하여 사실상 중앙계획체제가 붕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업과 경공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국가가 주민에게 식량과 소비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가배급제가 사실상 붕괴했다. 이와 함께 2차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 1998년 강성대국 건설 주장과 헌법을 개정하는 등 북한의 정책 노선에 일련의 변화가 나타났다. 물론 1998년의 경제성장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원조와 식량지원 등으로 완화된 것이지 북한 경제의 활력 때문은 아니다. 하지만 1999년 이후부터는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플러스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부터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사업에서 실리 보장을 강조하고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1999년 4월의 인민경제계획법, 2000년 1월과 9월의 연합기업소 체제의 개편 및 복구시도, 2000년 후반기의 “새로운 국가예산 수납체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등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났다.<sup>17)</sup>

북한측의 노력 및 조치와 함께, 국제적 대북 지원 증대 등의 요인으로

17) 박형중, “부분개혁체제의 출범, 난파와 복구: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북한경제,” 『북한 60년의 재조명: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제4회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정기세미나, 2002.11.8) 참조.

인해 1998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다소 완화되었으며, 일상생활은 다소간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만성적인 외화부족, 에너지 부족, 식량부족 등의 핵심적인 경제문제는 남아있어 여전히 경제위기 문제는 북한체제 안정의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 2) 위기의 변화: 새로운 위기의 등장

1999년을 기점으로 북한 경제가 호전되어 다소 나아졌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언제든지 위기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2002년 10월 촉발된 ‘핵’ 문제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북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조성되고 있다. 이른바 ‘2003년 위기설’이 등장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대북중유지원 중단,<sup>18)</sup> 대화 중단 선언, 중국·러시아를 통한 압력 강화 등 외교적으로 맞서 왔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봉인 제거, IAEA 사찰단 추방 등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오다 2003년 1월 10일 NPT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2003년 4월 베이징 3자 회담과 8월 27-29일의 베이징 6자 회담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줬다.

이러한 위기의 근원은 북-미간의 인식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불신하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심히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후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적대정책으로 새로 정립하는 가운데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분류하고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선제 공격론’까지 제시하면서 북한을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에 역사적인 6.15정상회담의 평화모멘텀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9월 20일에 백악관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북한을 이라크와 함께 대표적인 ‘악의 축’이며 ‘불량 국가(rogue

18) 그 동안 북한은 대북 중유지원 중단 조치로 전력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공장의 생산라인이 중단되고 있고,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state)’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미국의 방침을 ‘부시 독트린’으로 천명하였다. 부시 독트린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에 미국은 무력 사용을 포함한 독자적인 선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함으로써 북한과 한반도에 다시 초점이 집중된 것이다.<sup>19)</sup>

2002년 8월 부시는 “김정일을 증오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03년 4월 22일 베이징 3자 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에는 ‘김정일 정권 축출’이라는 내용의 럽스펠드 장관의 메모가 보도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북한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힘을 앞세운 미국이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북한에서 정치담론의 등장과 전개

북한은 스탈린체제나 히틀러의 독일 같이 폭력이나 테러보다는 선전·선동 등 설득을 통한 지배양식을 보여왔다 주체사상을 내세우면서 다양한(규범적·강제적·물질적) 수단을 사용하여 인적·물질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고 정치체의 권력유지, 확대를 도모하였다.

실제로 김일성은 집권초기부터 대중동원과 관련하여 담론정치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혁명과 대중동원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대중설득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북한에서 당사업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치사업’이란 바로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전인민을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당과 수령의 주위에 집결시켜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도록 하는 조직정치사업”을 의미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대중설득의 노력들이 중요한 당의 사업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져 왔다<sup>20)</sup>

북한에서는 북한사회의 규범적 어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통해 정치담론의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 북한체제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규범으로써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북한당국이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었다. 남한이 근대화 담론과 민족주의 담론을 결합하여 대중에게 호소함으로써

19) 『중앙일보』, 2002년 9월 23일.

20)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 (책세상, 2001), pp. 20-21.

동원체제를 형성하였다면, 북한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통해 대중에게 호소하였다.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담론인 주체사상도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통한 공산주의의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담론과 ‘자주성’과 ‘주체’를 핵심개념으로 한 민족주의 담론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1)</sup>

초창기 주체사상은 사대주의나 교조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제시되어 내재적 주체성확보나 대외적 대응논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당시는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혁명사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김일성 유일체제의 통치담론으로 굴절되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 북한체제 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화에 기여해 왔고, 국가신앙적 차원의 정통성 확보와 체제유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체제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그로 인해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기능을 하면서 비효율적인 지배담론이 되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명제로 요약된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195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 후 몇 번의 변용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이 그것이다. 앞의 개념정의에서 언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담론을 분석하면 1950년대 이후 나타난 혁명구호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해서<sup>22)</sup> 간단히 소개하면, 1950년대에는 경제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1950년

21) 위의 책, pp. 81-141 참조. 1960년대에 들어서 자주적인 노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는데, 당시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로 당의 총노선이 발전하게 된다. 또한 당시의 ‘주체화’는 맑스-레닌주의의 틀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지도적 원칙’으로서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로 구체화된 ‘행동 지침’이었다. 전효관, “남북한 정치 담론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p. 167.

22) 자세한 것은 이우영, 『북한사회의 상징체계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2) 참조.

대와 다르게 정치관련 구호가 압도적이며, 이념과 사상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내용상으로도 김일성 및 수령에 대한 강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도 정치관련 구호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수령과 관련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 수준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전 시기와 차이가 있다. 1980년대 역시 정치관련 혁명구호가 가장 많았으며 통일관련 구호가 많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후 진행된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능을 주체사상이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주체사상은 추상적 형태의 순수이데올로기로 존재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현실적 작업은 그로부터 파생한 변용담론인 ‘우리식 사회주의’나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sup>23)</sup> 즉 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담론이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대신했던 것이다. 특히 나진선봉지대 특구 형성 등 경제부문의 변화와 더불어 정치부문의 안정화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들 담론 역시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새로운 담론들이 요구되었다.<sup>24)</sup> 특히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새로운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인민들은 ‘수령’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으로 믿었고, 외형상으로는 체제 전체가 슬픔으로 뒤덮였으며 수많은 인민들의 오열이 결코 연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했다 그전까지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체제의 원동력으로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김일성의 존재에 달려 있었다.

김일성 사망후에는 김정일에 의해 ‘붉은기사상’과 ‘강성대국론’ 그리고

23)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한 것은 주체사상의 한계 때문이지만 이는 주체사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는 과거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이라는 틀을 원용한 것이다.

24) 당시는 사회주의권의 몰락, 김일성 사망, 북한 핵 위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 식량난 등으로 북한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서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던 시기이다.

‘선군정치’ 등 새로운 담론이 등장하여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없는 김정일 시대에 도 주체사상이 이상 없이 기능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 IV. 김정일 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담론

### 1. 새로운 정치담론의 등장 배경

김일성 사망 이후 등장한 대표적인 정치담론은 ‘붉은기 사상’(1995년), ‘강성대국’(1998), ‘과학기술중시사상’(1998),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1998), ‘선군정치’(199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담론이 등장한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붉은기사상이 등장한 1995년은 김일성 사망과 핵 위기 그리고 한층 심화된 식량난으로 인해 기존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배담론을 요구하였다 즉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수호를 위한 새로운 논리로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담론이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 8월에 ‘붉은기철학’, ‘붉은기사상’과 같은 ‘붉은기’와 관련된 담론이 등장하였다. ‘붉은기사상’은 1994년 11월 1일 김정일이 로동신문에서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통해 “나의 사상이 붉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같다”고 말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sup>25)</sup> 그 후 1995년 8월 28일 북한이 공산주의 청년동맹 결성일을 기념하는 이른바 「청년절」을 맞이하면서 『로동신문』이 “붉은기를 높이들자”는 정론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붉은기사상 한창 강조되고 있는 1996년은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도 붉은기사상의 소멸과 함께 1998년과 1999년에 ‘사

25) 북한에서 ‘붉다’는 말은 이른바 항일 유격대원들이 혁명적이라는 뜻으로 ‘붉은 동무’, ‘붉은 마음’, ‘붉은 바람’, ‘붉은 탄알’ 등으로 말을 만들어 쓴 데서 유래되었다. 『문화어 학습』, 1967년 4호 참조; 김영수, “주체사상의 변용과정과 붉은기 사상,”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 p. 136 각주 14)에서 재인용.

회주의 강행군'을 거쳐 2000년에는 '구보행군'으로 그리고 2001년에는 '진군'으로 변모하였다. 이 당시 '강성대국', '과학기술중시사상', '선군정치',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 등 새로운 정치담론들이 줄이어 등장하였다.

특히 1998년은 북한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해이다. 9월 5일의 헌법개정과 함께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고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공식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그간의 당-국가 체계의 내부 혼란을 정리하고 김정일이 직접 경제 현지도에 나서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을 기조로 계획경제 토대와 간부 및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재건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 등 '새로운 대고조'를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초가 되는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경제재건의 기초를 모색하였다.

한편 1999년과 2000년에는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사업에서 실리 보장을 강조하고,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해였다. 이러한 계획체계의 규율 강화 의도는 '내각의 권위 강화,' 1999년 4월의 인민경제계획법, 2000년 1월과 9월의 연합기업소 체계의 개편 및 복구시도, 2000년 후반기의 "새로운 국가예산 수납체계" 등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8년초 농민시장과 장사 활동에 대한 견제 조치와 노동자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1998년 7월부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명칭에서 '자유'가 삭제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한 행정통제가 증가했다. 1999년 2월에는 북한 전역 장마당 폐쇄를 시도하면서, 장사꾼들에게는 원래 일하던 공공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강성대국, 선군정치 등의 담론이 등장하였다.

그 후 2001년에 라남의 봉화가 등장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담론이 등장하지 않았다. 선군정치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는 가운데,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9월 3일 내각개편을 통한 김정일 정권의 친정 체제 강화가 내부적으로 진행되었다.

## 2. 김정일 정권의 대표적인 담론

### 1) 붉은기 사상

붉은기사상은 1995년 8월 28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강조되었는데, 동 정론에서는 붉은기를 “굴종을 모르는 인간의 높은 존엄과 불타는 정열이 진한 피로 물들여져 있는 붉은기는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리상과 희망의 표대이며 그 실현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굳은 신념의 상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6)</sup> 또한 “붉은기는 김정일동지의 신념이며 철학”이라고 밝혀 붉은기의 성격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즉 김정일정권의 지배담론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붉은기가 철학적인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향후 사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때까지는 ‘붉은기사상’보다 ‘붉은기철학’, ‘붉은기정신’ 등이 어우러져 사용되었다.

이후 붉은기는 정치적 구호나 슬로건으로 발전하였다.<sup>27)</sup> 또한 “위대한 영도자를 따라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신념의 표대이고 일심단결의 상징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sup>28)</sup>로 붉은기를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붉은기는 북한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sup>29)</sup> 1996년에 들어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1996년 “붉은기를 높이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는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쳐...”라고 하면서 김정일의 직접통치를 예고하였다. 혁명의 붉은기를 치켜든다고 보도하는 것은 김정일 나름의

26) 북한에서 붉은기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상징하는 기발”로 정의되어 왔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문화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58.

27)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억세게 전진해 나가자,” 『로동신문』 사설, 1995년 10월 4일.

28) “위대한 당의 기치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 『로동신문』, 1995년 10월 10일.

29) “붉은기를 높이들고 힘차게 전진하여 온 승리와 영광의 한 해,” 『로동신문』, 1995년 12월 30일.

‘붉은기사상’을 예고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를 붉은기사상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처음으로 ‘붉은기사상’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붉은기철학’이 ‘붉은기사상’으로 용어가 대체될 것을 시사하였다.<sup>30)</sup>

그 후 ‘붉은기사상’은 1996년 1월 9일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라는 제하의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서 정식화하기 시작했다. 정론에서는 붉은기사상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식대로 살아나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창조적 철학”이라고 밝혔고, “붉은기 철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전기를 밝힌 것”이라고 하여 주체사상의 하위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붉은기철학’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힌 심오한 혁명철학”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주체의 혁명철학이고 일심단결의 철학이며 신념의 철학”이라고 역설하고 있다.<sup>31)</sup> 이는 ‘붉은기사상’이 주체사상에 기초하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나온 체제수호의 기치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붉은기사상이란 단결을 하여도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단결을 실현하지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김일성 사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구축에 목적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당시 북한은 붉은기사상의 전위대를 만드는 작업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이 그것이다. 김일성이 사망하자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은 1996년 1월 19일 대표자회를 개최하여 동맹의 명칭을 바꾸고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부조직을 개편하였다. 그 후 청년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당정책 선전선동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는 당면한 정치경제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

30)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주체철학의 관계를 보면 철학은 사상이라는 통일적인 체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즉 사상이 철학보다 상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붉은기사상이 붉은기철학보다 상위개념인 것이다.

31) 이를 토대로 붉은기사상의 구조는 원리로 되는 주체의 혁명철학, 혁명의 원동력인 일심단결의 철학,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는 신념의 철학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는 사상이라기보다는 김정일의 난국타개를 위한 정국운영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서는 청년동맹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붉은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추진력을 상실한 3대 혁명소조를 사실상 해체하고 대신 청년동맹을 정치적 측면에서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오고 있다.<sup>32)</sup>

한편 북한은 붉은기사상의 실천적 지침으로 ‘혁명적 군인정신’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1996년 10월 18일자 「로동신문」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언급하고 있는데, “혁명적군인정신을 체득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의 제일체현자이며 우리 당이 요구하는 전위투사이다”<sup>33)</sup>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붉은기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같이 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sup>34)</sup>이라고 귀결시키면서 김정일 중심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북한체제가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혁명적 수령관’이 변용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35)</sup>

그 후 붉은기사상은 1997년 2월 황장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망명을 계기로 더욱 강조되었다. 북한은 1997년 2월 16일 대내방송인 중앙방송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붉은기사상을 내세우며 “비겁한 자야 갈테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라는 적기가를 더욱 고

32) 김영수 외, 『김정일 시대의 북한』 (삼성경제연구소, 1997), p. 565.

33) “모두 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로동신문』 사설, 1996년 10월 18일.

34)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공동사설(1997.1.1).

35) 정성장, “김정일 체제의 지도이념과 성격 연구: ‘붉은기사상’과 북한 체제의 변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1999), p. 312. 최근에도 북한은 핵문제로 인한 북-미간의 갈등속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선군시대의 실천적 구호로 부각시키고 전 주민의 사상적 결속을 강조했다. 2003년 3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은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을 허물고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지만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빼와 살로 체질화 한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의지와 정신력은 꺾을 수도 와 해시킬 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일심단결을 강조했다.

창했다.<sup>36)</sup> 중앙방송은 이어 북한은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킬 것이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더욱 자랑스럽게 온세상에 펼치는 것이 북한 노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공언했다. 황장엽이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주체사상 대신에 붉은기사상의 고취를 더욱 촉진 시켰다.<sup>37)</sup> 그러나 1997년 10월 김정일의 당 총비서 취임과 황장엽 망명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면서 붉은기사상에 대한 강조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김정일정권이 극심한 체제위기의식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붉은기사상이 과거지향적인 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강성대국

북한에서 1998년은 ‘고난의 행군’에서 ‘사회주의 강행군’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북한에서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과 함께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새로운 담론으로서 ‘강성대국론’을 내세웠다.<sup>38)</sup> 강성대국은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서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었는데<sup>39)</sup>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은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라고 한다. 그리고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착취와 억압, 가난과 무지, 침략과 략탈, 지배와 예측으로 얼룩진 지난 시대의 반동적, 반인륜적 국가건설사에서 종지부를 찍고 인민의 자주적 요구,

36) ‘붉은기’라는 용어는 북한이 공산혁명을 상징하고 있는데, 해방전 김일성의 항일운동 당시 창작보급 되었다는 ‘적기가’는 해방후 북한정권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을 상징하여 북한에 보급되었다.

37) 대표적인 것으로는 “붉은기사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1997년 2월 26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7년 5월 1일.

38) 북한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 1월 4일자 『로동신문』 정론 “사회주의 승리자의 기개를 떨치자”에서 이다. ‘주체의 강성대국’은 1998년 1월 18일 『로동신문』 사설 “백두의 붉은기 정신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혁명정신”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39) “강성대국,” 『로동신문』 정론, 1998년 8월 22일.

인류의 념원을 전면적으로 꽃피워주는 영원한 리상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대국가수반앞에, 조국과 민족 앞에 다지신 애국충정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이다”라고 밝히면서 강성대국 건설이 김정일의 구상과 결심임을 강조했다.

동 정론에서는 “사상과 군대를 틀어쥐면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서 근본을 틀어쥐는 것으로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의 근본이 사상과 군대임을 밝혔다. 그리고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 건설방식이다”라고 밝혀 정치·군사중시사상을 한층 더욱 강조하였다. 즉 북한에서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은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의 건설이며, 건설 방식 역시 사상강국→군사강국→경제강국 순으로 강국을 만드는 것이다. 사상강국, 군사강국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의 강대성은 사상의 힘, 정치의 위력에 있다”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정치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라고 역설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sup>40)</sup> 이는 곧 북한의 미래상이자 최고의 목표인 것이다. 또한 200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 나갈 총진격의 해”<sup>41)</sup>로 규정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지속시키며 사상, 총대, 과학기술 중시 등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강성대국은 사상,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

40)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사설, 1998년 9월 9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 『로동신문』 사설, 2000년 6월 19일.

41)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신년 공동사설, 2000년 1월 1일.

가 실현된 국가체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2002년부터 최종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3년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선군 기치따라 강성대국 영마루로 총진군해 나가는 대담한 공격전의 해, 거창한 변혁의 해<sup>42)</sup>로 규정하면서 북한주민들을 독려했다

### 3) 과학기술중시사상

북한에서는 1990년대 후반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하여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이 부각되고 있다. 김정일이 제시했다고 하는 과학중시사상의 연원은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의 공식 문헌에 따르면, 김정일은 1985년 8월 “과학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를 계기로 1986년에는 중앙과학기술축전이 최초로 개최되는 등 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에 의욕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그는 1991년 10월 전국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과학 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서한을 보내 과학 기술 발전의 전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혔으며 이를 영도했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1996년 11월 “나는 과학을 중시한다”며 과학중시사상의 태동을 알린 김정일은 1997년부터는 “현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 기술은 경제적 진보의 기초”라며 전국에 과학중시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다.<sup>43)</sup> 그 후 북한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sup>44)</sup>”며 과학중시를 김정일의 사상으로 내놓았다. 즉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추동력<sup>45)</sup>”이라는 것이다.<sup>46)</sup>

42) 『로동신문』 신년 공동사설, 2003 1월 1일.

43) 권경복,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과 북한 경제,” 『통일경제』 통권 제53호(현대경제연구원, 1999.5), pp. 85-86.

44)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사설, 1999년 1월16일.

45)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 대회 개최,” 『로동신문』, 1999년 11월 4일.

46)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에 대한 강조는 1998년 8월 인공위성 ‘광명성 1호’로 칭해진 로켓발사를 계기로 빈번해졌다.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997년과 1999년을 각각 ‘과학의 해’로 설정했고 1998년부터는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해 전국적인 과학기술혁신을 촉구했다. 북한이 ‘과학중시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은 2000년도 신년 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중시’를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과학중시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sup>47)</sup> 적극적인 실리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산업전반에 걸쳐 현대적 기술개건을 꾀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48)</sup>

그렇다면 북한측이 말하는 과학중시사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과학기술 발전을 우선시하며 과학 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사상’ 혹은 ‘주체혁명 위업을 과학기술로 담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현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고, 과학과 기술은 경제적 진보의 기초이며, 결과적으로 과학자·기술자들은 강성대국 건설에 더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과학중시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sup>49)</sup>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기술 혁신이라는 차원을 넘어 향후 중장기

47)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로동신문』 · 『근로자』 공동논설, 2000년 7월 4일; “당의 혁명적 경제 정책과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당 창건 55주년 기념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 『로동신문』, 2000년 8월 1일; 또한 “과학기술 없이는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없으며 과학은 단순한 기술수준이 아니라 조국의 운명과 강성대국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방송』, 2001년 3월 3일. 최근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현 시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가장 절박하고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고 있다며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육성, 과학자 양성, 과학, 기술자 돌격대 활동 강화 등을 크게 강조했다. 『로동신문』, 2003년 11월 10일.

48) 이처럼 ‘과학중시사상’은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취약한 실리추구의 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

49) 권경복, 앞의 글, p. 86.

발전 전략의 목표로서 이른바 'IT 산업'의 집중 육성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이른바 '혁명적 경제 정책'은 자력更生 원칙을 강조한 '강계의 혁명 정신'이나 절대적 노동력의 동원을 강조하는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유용한 방도일 수 있으나, 정상화 이후에 북한이 추구해야 할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결국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이 같은 단기적 경제 정책의 한계를 전제로 향후 북한의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토대로서 제시된 목표라 할 수 있다.<sup>50)</sup>

김정일 정권의 입장에서는 경제난·식량난 해결이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권의 정당성에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실리위주의 정책 선택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만 체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기보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도 결국에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 당국의 과학 기술 개발 정책은 강성대국 건설 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북한의 생산력 저하는 전력난에 큰 원인이 있겠지만 각종 기술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정일도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우리는 열 걸음 백 걸음으로 달려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선진 수준으로 올려세워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력更生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의 과학 기술 수준은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4) 선군정치

한편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에 있어서 '선군정치'의 기치하에 군이 앞장서서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군정치의

50) 김근식,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 정책 변화: 혁명적 경제 정책과 과학 기술 중시 정책,” 『통일경제』, 2001. 1·2 통권 제73호(현대경제연구원, 2001), p. 44.

등장은 1997년 10월 중앙방송 정론을 통해 ‘선군후로’라는 용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고,<sup>51)</sup> 1998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기념일에 나온 선군혁명사상·선군혁명영도(1998년 4월 25일, 『로동신문』 논설)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다.<sup>52)</sup>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찾고자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선군정치(1998년 10월 21일, 『조선중앙방송』), 선군후로의 정치방식(1999년 2월 5일) 등의 표현이 등장하였다. 이들 용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 의미는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1999년 6월 16일 『로동신문』 과 『근로자』 공동논설 형식으로 선군정치가 김정일정권의 통치방식으로 공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당국은 1999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5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조명록 군총정치국장 겸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을 대신하여 정권기관이나 내각보다 먼저 추모사를 대독케하여 선군정치를 명백히 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독특한 선군정치 방식을 확립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지름길을 열었다”고 했다. 이는 선군정치가 제도화되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제도적으로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군사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체제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또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를 추켜세우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나라를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이 거창한 사업은 선군정치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sup>53)</sup>고 하여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는 내부동요를 방지하고 체제단속과 결속을 위한 것으로 적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일 뿐 아니라 경제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치방식이다 북한당국이 향후 조직력, 규율

51) 이기동,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 정책변화,”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통일연구원, 2001), pp. 277-278.

52) 박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현상과 인식,” 『통일정책연구』 제9권 2호(통일연구원, 2000), p. 130.

53) 『조선중앙방송』, 1999년 7월 13일.

성, 혁명성 등이 뛰어난 군 위주의 경제건설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이러한 풍토를 전 사회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이루어진 강성대국 건설 과제 가운데 경제강국 건설만이 남았다면서 전체 주민들에게 경제 부흥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해 왔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또 하나의 배경은 대외적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위기관리차원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들의 군사적 위력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2003년 4월 21일 『로동신문』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군사중시, 국방력 강화를 국사 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을 혁명적으로 해나가는 우리 식의 독특한 정치방식”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선군정치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은 고사하고 나라의 자주권도 지켜내지 못하고 외세의 희생물이 된지 오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군의 역할과 위상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선군정치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 끝났고, 앞으로도 선군정치를 지속해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점에서 볼 때 북한군대의 역할변화가 주목된다. 또한 ‘사상으로서의 선군정치를 주체사상을 계승한 사상’으로 주장하면서,<sup>54)</sup> 향후에도 지속적인 통치담론으로서의 역할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조국보위와 혁명대오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전진시키는 데서 총대의 역할이 작용하지 않는 데란 그 어디에도 없다”<sup>55)</sup>며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옹위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가 ‘총대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4) 선군사상을 “주체사상의 이론 실천적 업적을 계승하고 새로운 이론들로 발전 풍부화시킨 사상이며 주체사상의 중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전투적 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3년 3월 21일.

55) 『로동신문』, 2003년 12월 22일.

### 3. 김정일 정권 정치담론의 특성

위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담론들은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대중동원 경제건설 그리고 사회적 통제와 사상교육을 위해서 기능하였다

그런데 최근 ‘강성대국, 선군정치 등이 주체사상을 대체할 것’이라는 견해나 ‘북한지도부가 주체사상을 퇴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주체사상을 과소평가하거나 강성대국, 선군정치 등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강성대국이나 선군정치 등은 단순한 정치구호이기 때문에 세계관과 역사관 그리고 혁명이론 등으로 구성된 주체사상을 대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는 주체사상과 정치구호를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등가성이 없다

김정일 정권 이후 등장한 많은 담론들을 보면 부강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담론들이 북한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들 담론들은 여전히 수령제를 정당화하는 통치담론이라는 점에서 주체사상의 틀 안에 있다. 즉 주체사상에 근원을 둔 하위담론들이다.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은 김일성 시대의 대내외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대응해 주체사상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대신에 새로운 하위 담론을 제시해 연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쫓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내적인 단결과 결속을 위한 것이며, 부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새로운 상황의 적응을 위한 것<sup>56)</sup>이다.

결국 주체사상이 상황에 따라 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해 자기수정적인 변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김정일 시대에도 큰 이상 없이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이 북한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메카니즘으로 완벽하게 기능하였음을 감안할 때 주체사상의 질적변화는 거의 힘들 것이다.

한편 최근의 로동신문에 가장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자주성’담론이다. 이 자주성개념은 주체사상의 가장 핵심적 개념으로서 최근 통일문제,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자주성’의 문제를 ‘우리식’, ‘우리끼리’, ‘민족공조’ 등과 연결시키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자주성의

56) 정성장·백학순, 앞의 책, p. 56.

개념은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남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 논리이자 북한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57)</sup>

2002년 10월, 북-미간에 핵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조성되면서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우리민족 제일주의’가 북한 사회 전반에 다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남북 민족공조라는 이름으로 단결과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성과 전통 그 자체에 대한 강조가 정치 담론에서 다시 드러난 것이다.

북한은 2003년 2월 27일자 『로동신문』에서 “6.15 북남공동선언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며 화해와 통일과정을 추동하는 위력한 담보”라며 “이를 고수하고 이행해 나가기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 용약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3년 4월 18일 평양방송은 “민족의 대단결은 오늘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하면서 민족대단결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2003년 11월 24일자 『로동신문』에서도 6.15 공동선언을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강조했으며,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라며 민족공조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민족담론을 이용하여 체제유지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민족제일주의’가 1980년대 후반 당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의 정당화 담론으로서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정책 제공과 같은 실천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에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민족공조는 국제적 지지를 받지 못하며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민족’이라는 구호로 감성에 호소하여 일시적으로는 주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7) 전미영, “북한지도부의 정치담론에 대하여,” 제4기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북한인권시민연합/동국대 북한학과 공동주최 자료, 2003.5.1) 참조.

## V. 맺음말

북한은 심각한 체제위기에 처해 벗어나기 위해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사상 정치교육과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제난 지속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북한체제를 유지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먹는 문제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현상 유지와 현상 극복의 갈림길에서 아직도 일관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 당분간은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이념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담론이나 구호를 계속적으로 등장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김정일 정권은 수많은 담론을 생산해왔는데 그것들은 단순히 일 반대중들을 가치와 이념의 수준에서 설득하려는 수사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와 생산적 자원의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제도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그동안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이를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강제 등의 실패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에 북한의 주체사상은 '민족'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획득하고 강조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데올로기의 권위상실을 상쇄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체제의 정당성의 위기로 말미암은 북한정권의 붕괴는 그리 빨리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지배이념의 쇠퇴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체사상의 긴장현상과 관련이 있다. 또한 지배이념의 통제력 쇠퇴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체사상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주체사상의 통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계속되는 주체사상의 변화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문을 누적시키고, 이는 과거에 비해 지배이념으로서의 상대

적 왜소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북한은 자신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선군정치를 통해 주체사상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과 김정일 중심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향해 인민대중이 단결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체제변화 강제의 엄중한 내외압을 실리주의적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체제붕괴의 요인을 억제할 것이다